

[카드뉴스] 금융 정책과 금융감독·규제의 새로운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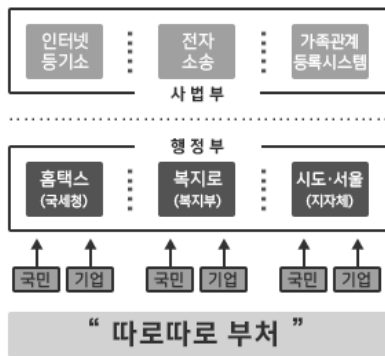
지난 10월 6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분과 전문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로드맵 수립에 나섰다. 내년 3월까지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그동안 독점적 공급자로서 일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부처 장벽 타파+민관 협업 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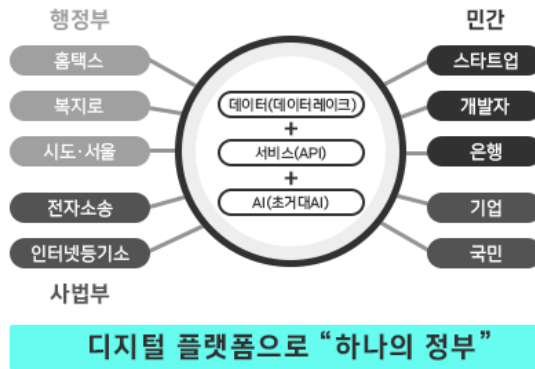
지난 9월 2일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류제명 추진단장은 ‘2022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기존 전자정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차이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와의 차이로 설명. “전자정부 시스템은 뛰어나고 효율적이지만, AI와 블록체인 등 기술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도전과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 강조.

전자정부 VS 디지털플랫폼정부

현재 정부 모습



디지털플랫폼정부 모습



자료: 인수위원회 발표 자료, 2022. 4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5대 중점 추진과제

- 1 국민과 기업이 단기간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 추진
- 2 누구나 쉽게,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 3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국가 현안·난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업 활성화
- 4 정부는 데이터·핵심 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 5 활용과 보안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체계 구축,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대국민 신뢰 제고

자료: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6.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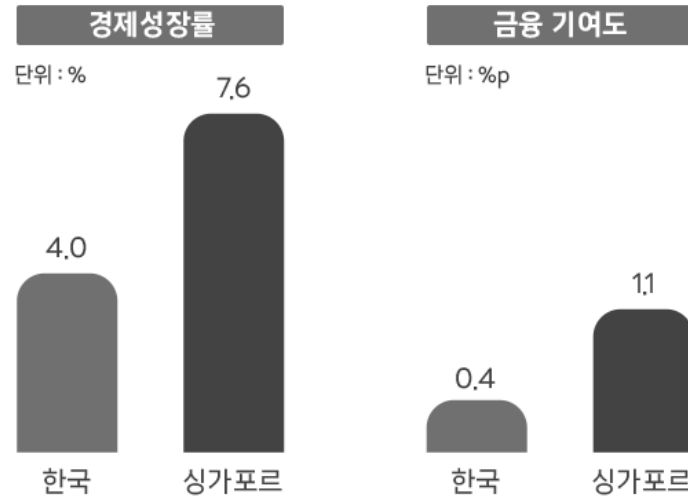
검토·준비중인 주요 법안/정책

- 디지털자산기본법
-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 비중권형코인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 법정부 디지털 국가 전략 수립예정(8월)

글로벌 금융 중심지 마련 위한 금융 산업 혁신 필수

글로벌 금융허브 지형이 바뀌는 지금
싱가포르 등 최근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 위상을 더해가는
국가들이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는 점 주목!

금융 산업 성장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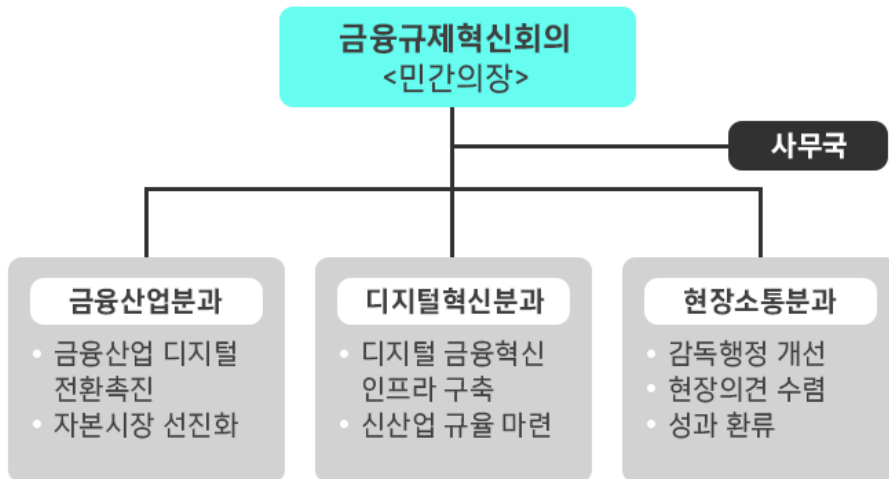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등, 이데일리, 2022. 7. 26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등 혁신 준비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과 ‘선진화된 규율 체계 구축’ 두 트랙 전략 필요.
 지난 7월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 출현이 가능한 금융 규제 혁신에 본격 돌입 발표.

금융규제 혁신 추진 체계도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 산업 발전을 담보하는 규제 혁신 지속 추진

금융위는 7월부터 매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 예정.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과제 중심의 금융 규제 개선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1.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 ①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
- ②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
- ③ 비금융정보 활용을 통한 보험서비스 고도화
- ④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2. 외부자원 및 신기술 활용 활성화

- ⑤ 업무위탁 제도 개선
- ⑥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개선
- ⑦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
- ⑧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3.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

- ⑨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관련 제도 개선
- 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 검토
- ⑪ 카드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 ⑫ 보험그룹 내 1사라이선스 규제 완화

디지털 금융 혁신 인프라 구축

4. Data, 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

- ⑬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추진
- ⑭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선
- ⑮ 오픈뱅킹을 오픈파이낸스로 확대(참여업권 확대 등)
- ⑯ 제도화 예측가능성 제고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5.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 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⑱ 디지털 증권 규율체계 확립
- ⑲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

자본시장 선진화

6. 자본시장 자율성 확대 및 경쟁 촉진

- ⑳ 공모펀드 활성화
- ㉑ 신탁재산 범위 확대 등 신탁의 운용 자율성 강화
- ㉒ 펀드 판매보수 책정·수취시 판매사 자율성 확대
- ㉓ 대체거래소(ATS) 도입

7. 자본시장 투자수요 활성화

- 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자본시장 제도 정비
- ㉕ 대고객RP 담보 확대 등 채권시장 투자환경 규제 완화
- ㉖ 장외시장(비상장주식) 거래 규제 합리화
- ㉗ 영문 공시 등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 공시 제도 개선
- ㉘ ESG 공시 제도 정비

8. 기업 부담 완화

- ㉙ 회계법인 재무제표 작성 관련 자금금지
- ㉚ 규제 합리화
- ㉛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
- ㉜ 상장폐지 요건 합리화

9. 감독행정 개선

- ㉝ 금융행정지도 혁신적 개선
- ㉞ 감독·검사·제재 행정 개선
- ㉟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신고절차 개선
- ㊱ 해외진출 관련 국내외 필수정보 제공·지원
- ㊲ 특수관계인 범위 등 대주주 규제 합리화

출처: 금융위원회

규제 문턱 높은 금융 혁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책 전환 중요

최근 금융 규제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2018년 제기된 핀테크 규제 완화에 대한 보고서 주목.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중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 방식 비교’에서 중국은 네거티브 방식의 열린 규제로 한국과 대조적인 모습.

한중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 방식 비교

구분	중국	한국
유연한 규제	사후규제 네거티브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 시범적 사업 허용	사전규제 포지티브 규제(원칙 금지, 예외 허용) 핀테크 사업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 계류중
시장진입 제한 최소화	업종별 칸막이 규제 없음	업종별 칸막이 있음 (전자금융거래법상 업종구분→진입요건 다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정 없음	최근 은산분리 규제 완화 (4%→34%)
	비금융사의 금융시장 진입 확대 (비금융사의 자기자본 소액대출 회사 설립 허용, 플랫폼 통한 자산운용상품 판매 가능 등)	비금융사의 금융시장 진입 제한적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 자산운용상품의 투자 중개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만 가능 등)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알리바바의 성공을 이끈 중국 규제완화의 2가지 특징', 2018. 10. 5

금융감독 체계, 거시건전성·소비자 보호가 변화의 핵심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원에 있던 기능 가운데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 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에 일임.
업권별로 나뉘져 있던 감독기구들은 금융감독원으로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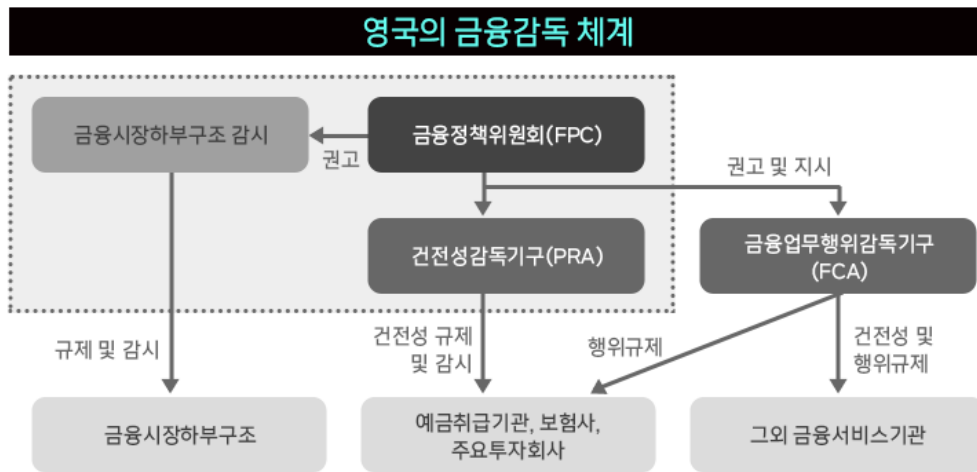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변천

구분		1998년 4월 이전	1998년 4월~ 2008년 2월	2008년 2월 이후
국제금융	정책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감독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내 금융	감독 집행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료: 서울신문, 2022. 4. 14

영국, 통합형 독립감독기구 FSA 없애고 PRA와 FCA 출범

영국의 경우 통합형 독립감독였던 금융서비스기관(FSA)을 없애고
건전성감독기구(PRA)와 소비자보호기능을 맡는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CA)를 출범.
중앙은행(영란은행)에는 금융정책위원회(FPC)를 설치해 거시건전성 감독을 맡겼고,
FPC가 PRA와 FCA에 지시와 권고.



출처: 서울신문, 2022. 4. 14

한국, 글로벌 금융중심지 위한 필수요건

전문가들은 금융 산업 또한 자체 경쟁력 제고할 것을 강조.
먼저 혁신기업 성장 단계에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핀테크 활성화 위해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과 원칙 중심으로 개선하며, 데이터 인프라 혁신 필요.

주요국·도시 금융 환경의 변화



뉴욕

고액연봉자들을 대상으로 여타 주(state)들에 비해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뉴욕주의 조세정책과 맨해튼의 비싼 임대료 및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산으로 일부 헤지펀드, PEF 등 금융사들이 플로리다 등으로 사업장 이전이나 신설 계획 및 진행



런던

브렉시트 이후 많은 금융회사들이 런던을 떠나 유럽 대륙으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계획



홍콩

2020년 5월 28일 중국이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후 홍콩인들의 해외이주 계획이 급증하고 금융회사들의 '엑소더스 현상' 또한 증가세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주요 글로벌 금융중심지 환경변화와 시사점', 2022. 4. 14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